‘단독처리’ ‘인준반대’ 부담…일단 시간벌기

■ 여야, 이완구 인준안 처리 16일로 연기 속사정

일정만 연기 합의점은 찾지 못해 청와대 개편·개각 인사 늦춰질듯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강경 대치해온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며 일단 일정을 연기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2일에서 오는 16일로 연기한 것이다.

여야 모두 여론 부담에 따라 시간 벌기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단독 처리 부담에, 야당도 3번째 총리 인준 반대와 충청 여론 부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는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준안 처리 시기만 12일에서 오는 16일로 연기한 것 외에는 여야 간에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만 연기된 거지, 인준안 처리 합의는 아니다”며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16일 본회의 등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애초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23일 본회의 연기안에서 16일로 수정해 여당 측에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애초 이날 오후 4시까지 단독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여야 충돌 분위기가 고조됐다. 인사청문특위는 한선교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7명, 새정치연합 6명으로 구성돼 있어 새누리당의 단독처리가 가능했다.

새정치연합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국보위 총리를 임명하더니 독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냐”는 등 고함을 지르며 거칠게 항의한 뒤 퇴장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에서 기류는 급반전됐다. 새누리당은 단독 처리 방침에서 벗어나 본회의를 연기해달라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수용했다. 여기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국회의장이 어떻게든 여야간 합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여야가 1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합의하면 그 때 가서는 의장이 사회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 의장은 “16일 본회의에선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인준 표결을 할 것”이라고 말해 강행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새정치연합은 16일까지 여론 동향을 살피며 당일 최종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나 반대 의사를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처럼 본회의에 불참할지, 본회의에 참석해 표 대결을 벌일지는 미지수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서둘러 비서실장 교체 등 후속개편과 소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인적쇄신의 시점은 이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당일이나 다음날인 17일이 유력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긴박한 새정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부터)와 우윤근 원내대표, 주승용 최고위원이 12일 국회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 등과 관련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 속도낸 문재인…광주·전남서 ‘호남끌어안기’

“당 원로 만나고 초계파 원탁회의 운영…지지율 40%까지 높이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통합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당직 인선에서 친노계 인사들을 배제한 데 이어, 당 원로들과의 만남, 계파를 초월하는 원탁회의 운영 계획을 밝혔으며 주말에는 호남 방문에 나선다.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계파·지역 갈등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 당의 지지율 상승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문 대표는 12일 여의도에서 상임고문단 1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당의 운영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문 대표는 “전대 기간에 국민들이 당에 요구한 것은 제발 단합 좀 하라는 것”이라며 “경선 과정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걱정도 많으셨을 화합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원로들은 일부 의원들이 “당에 기강과 범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두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강력히 반발한 데 이어 전병헌 최고위원까지 내부 비판에 가세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고문은 “당 지지율이 올라 갈수록 안에서부터 잘 해야 한다”며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문 대표는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고, 윤리위원회를 윤리심판원으로 격상했다”며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표는 상임고문들에게 계파를 초월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총선까지 당 지지율을 4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상임고문단 회의에는 김한길·안철수 상임고문은 참석하지 않아 통합 행보에 빛이 다소 바랬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두 상임고문과는 별도로 약속을 잡아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표는 14일 광주에서 5·18 민주화 묘역을 참배하고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면담하는 등 ‘호남민심 끌어안기’ 행보도 계속할 예정이다.

문 대표는 이날 강진까지 들러 백련사 인근에 칩거해 있는 손학규 상임고문과 오찬을 하려 했으나, 손 고문 측이 “이미 정치를 떠났다”며 사양, 회동이 무산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문화정책 성공하려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할 중요”

■ 광주시의회 亞문화전당 개관 전문가 초청 특강

광주시가 성공적인 문화정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광주시 문화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전문가 초청 특강에서 강사로 나선 김하림 조선대교수는 “현재 광주시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캠코사건 이후 업무추진이 위축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7대 문화권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주혁신도시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아시아문화전당의 가교 역할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7대 문화권은 문화전당권, 아시아문화교류권, 아시아전승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 아시아신과학권, 교육문화권, 문화경관·생태환경보존권이다.

그는 이어 “아시아에서 광주가 가진 역사적 유산과 근대화·민주화 경험을 십분 활용하고, 지속적인 인력개발 및 행정지원이 뒷받침되도록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특강은 광주시의회 의정혁신연구회(대표의원 김보현) 주최로 열렸으며, 광주시의원들이 참석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법적 하자 많은 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사각지대 놓여 있다”

임택 시의원 “보완 시급”

사단법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의 투명한 운영 등을 위해 재단법인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임택(동구 1·**사진**)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시로부터 연간 8억원 가량의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의회 행정사무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회원 중심의 사단법인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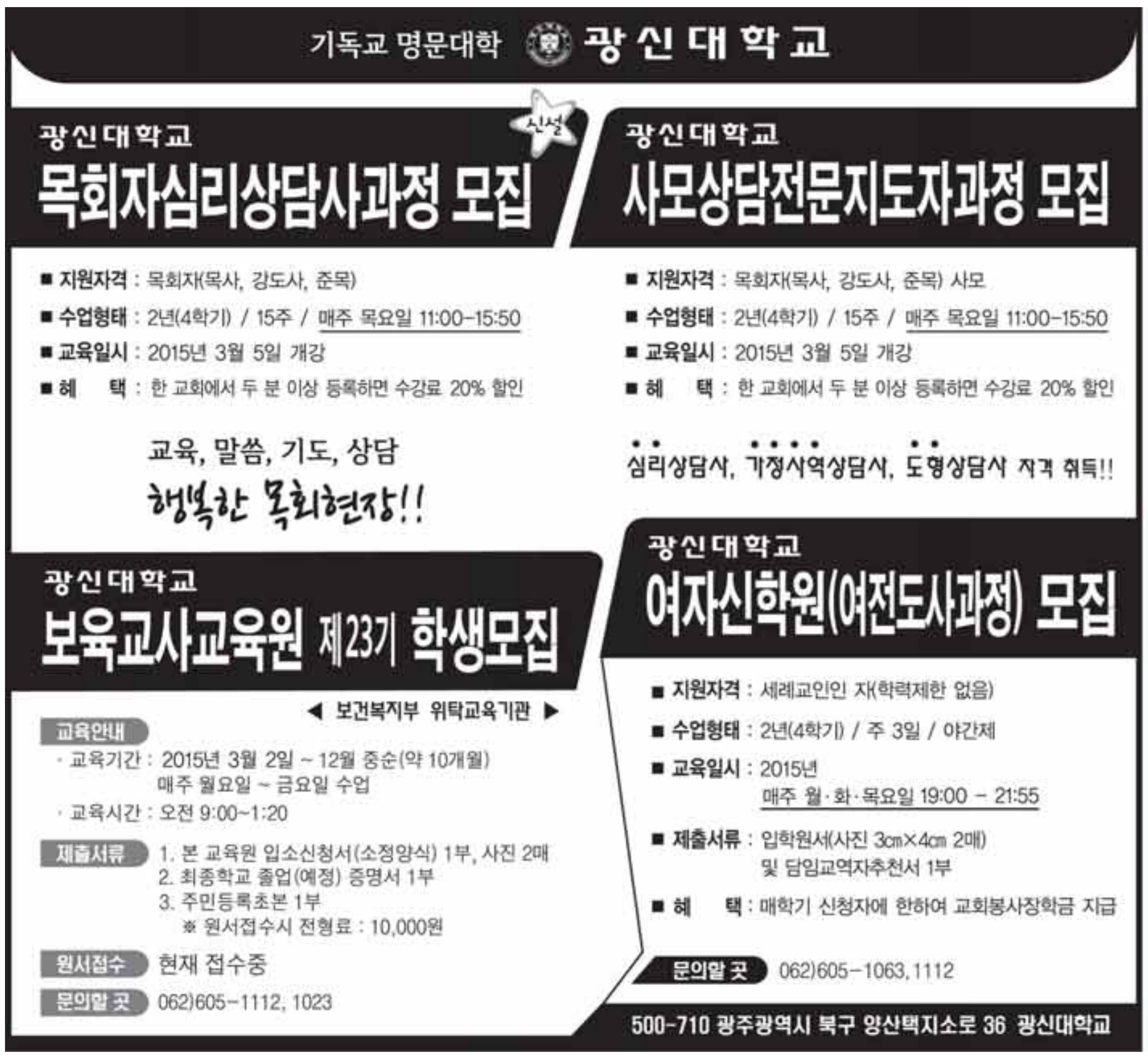
임 의원은 또 “연수원의 정관 또한 미흡해 상임이사를 겸한 원장 선출(추천)이 총회에 있음에도 이사회에서 하고 있어 임명절차를 어기고 있다”면서 “얼마 전 임명된 원장도 잘못된 정관에 의해 이뤄진 법적인 하자가 있는 인사로, 무효의 가능성까지 있고, 특히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사회는 시장에게 위임을 해버려 인사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단법인의 이른바 회원인 사원으로 광주시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서 정작 이사장은 행정부시장, 관련 부서 공무원은 이사를 맡고 있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 광주시당 “구간 경계조정 선거구 획정과 무관”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광주시에 구간 경계조정을 요청〈**광주일보 2월12일자 1·3면**〉한 것과 관련, 시당은 12일 “이번 구간 경계조정 요청은 지난 2011년 일부 지역의 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에 따른 조치일 뿐 선거구 획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 이뤄진 일부 지역의 구간 경계조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당시 북구 동림동, 운암동 일부를 서구로, 북구 풍향동, 두암 3동, 중흥 1동, 우산동 일부를 동구로 편입하는 등 구간 경계조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해당 지역민들은 생활편익을 무시한 구간 경계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박혜자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날 “당시 구간 경계조정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생활편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외곽 확장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와 도심 간 공동체적 균형 발전을 위한 논의 차원에서 요청을 했을 뿐이다”며 “따라서 선거구 획정을 염두에 둔 요청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